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의 조건과 발전 과정

김 준 협*

I. 서론

일반적으로 지역 내 통합은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정치·안보 등 상대적으로 보다 민감한 분야로 통합에 대한 모색이 과급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Lee et al. 2007). 이 중 경제 분야의 통합은 국가들 간 낮은 단계의 협력 차원에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지역 경제통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통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화·용역에 대한 무역을 다루는 실물경제 부분과 통화, 투자 등 자본의 흐름을 포괄하는 금융경제 부분이 그것이다. 실물경제 부분의 협력으로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국가 간 거래를 활발히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협정은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금융경제 부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인 지역 유동성 기금은 금융위기 발생 시 지역 내 참여 국가들 간 조성된 기금으로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아세안+3 지역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 국가들과 한

* 고려대학교 글로벌리더십센터 펠로우. leadoffkjh@gmail.com.

국·중국·일본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최근 십여 년 동안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3 국가들은 1997년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99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하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안보 등의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 2000년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체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는 아세안+3 지역 내 경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으로 확대되어 한국 16%,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아세안 10개국 20%를 분담하여 1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하였다(기획재정부 2009). 이와 같은 일련의 협력들을 보면, 아세안+3 지역 내 경제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아세안+3 지역의 경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요 사건은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지역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을 지역 경제 협력의 발전 원인으로 주목하기도 한다(Amyx 2005).

그런데 아세안+3 지역의 경제 협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협력 분야 중에서 금융 부분, 그 중에서도 단기 유동성 측면에 집중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양자간에 산발적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있다. 주목할 것은 지역 경제통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의 통합이 진전된 이후 금융경제 부분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세안+3 지역은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실물경

제 부분의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금융경제 부분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통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아세안+3 지역에서 금융 부분의 경제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틀’은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에서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틀의 형성은 곧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리더의 정책 결정’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통합을 이끌어가는 주체인데,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들의 특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경제통합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외부적 충격’은 지역 경제통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인데, 아세안+3 지역의 경우 리더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으로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요소이다. 이 세 가지 변수들은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하나의 변수만으로 경제통합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다른 변수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즉, 지역 경제통합의 진전과 달성에 대해 제도적 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리더의 정책 결정이, 리더의 정책 결정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외부적 충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 변수들이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각각의 가설을 제시한 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아세안+3 지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주의와 세계화와의 관계, 지역 경제 협력에 있어 미국 또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과 같은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 또는 그들의 지역 내 영향력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지역 내부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협력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3 지역 내 경제통합의 조건 및 발전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II. 경제통합의 이론적 배경

1. 경제통합의 개념, 특성 및 유형

경제통합은 크게 무역부문과 금융부문의 통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는 경제연합의 단계에서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 실물경제 부분은 크게 ① 특혜무역협정 ② 자유무역지대 ③ 관세 동맹 ④ 공동시장 ⑤ 경제 연합의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Balassa 1962).

특혜무역협정은 참여국 간 특정 상품에 대해 호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서 상호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참여국들의 특정 상품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상호 경제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양국 간 또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형성되며,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교역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1950년대부터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등도 협정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관세 동맹은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여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유무역지대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각각의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공동 시장은 관세 동맹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 무역 정책과 금융, 재정 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테두리 안에서 재화·서비스·자본·노동력 등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역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공동 시장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이전 단계인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에서 구현된 바 있다(Mirus et al. 2001: 3-5).

경제 연합은 경제통합의 가장 최종 단계로, 통합된 경제 정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산업 및 금융 정책에 차이가 전혀 없게 되고 단일 통화가 통용되게 된다. 또한 경제 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 내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법률·규칙·조항들을 일괄적으로 법제화하고 총괄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 연합의 단계에서는 모든 재화·서비스 및 금융 분야가 통일된 정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되지만,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통합은 그 목적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무역에 관한 협정은 주로 거래 비용의 감소,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금융 분야의 협정은 비용 감소와 함께 위험 회피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경제 부분을 경제통합의 단계로 분류하면 ① 지역 유동성 기금 ② 지역 통화 시스템 ③ 재정 동맹 ④ 경제 연합 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Dieter et al. 2003).

지역 유동성 기금은 지역 내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대비하여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금융 위기가 가져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국가 간 지역 유동성 기금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진전된 경제통합의 단계인 지역 통화 시스템으로 이끌고 있다. 실례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금 조성과 함께 지역 통화 시스템으로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CMI로 지역 유동성 기금이 조성되었다.

지역 통화 시스템은 해당 국가 내에서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거나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EU는 동일 통화를 사용하는 통화 연맹에 해당한다. 이는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화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독자적으로 이율을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자국 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Pomfret 2006: 74).

<표 1> 경제통합의 단계

	무역 협정 유형	특징	금융 협정 유형	특징
경제 통합의 강도 	특혜무역협정	특정 상품에 호혜 관세 부분적 철폐	지역 유동성 기금	위험 회피 목적으로 공동 기금 조성
	자유무역지대	무역장벽 철폐 비회원국 다른 관세		
	관세 동맹	관세 철폐 및 역외국에 공동 관세	지역 통화 시스템	역내 국가 간 고정 환율 (단일 통화)
	공동 시장	무역 정책 등에 공동의 정책 수립	재정 동맹	참여 국가 간 금융정책 동일
	경제 연합	통합된 경제 정책 / 단일 통화 / 초국가적 기구 출현		

주: 무역 협정 유형은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Routledge, 1962) 참조, 금융 협정 유형은 Heribert Dieter and Richard Higgott, "Exploring alternative theories of economic regionalism: from trade to finance in Asian co-operation?" (2003)을 바탕으로 재구성함.¹⁾

재정 동맹은 지역 통화 시스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참여 국가들 간 금융 정책까지 동일하게 발전시킨 형태를 말한다. 현재 EU의 경우에는 재정 동맹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2010년 발생한 그리스 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 동맹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Bloomberg Businessweek 2010/5/12).

2. 지역 경제통합의 조건

앞서 경제통합의 종류를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로 나누고 각각의 통합 형태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이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틀, 리더의 정책 결정, 외부적 충격이라는 지역 경제통합의 조건들이 경제통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할 때 각각의 조건에 따른 가설을 검증할 때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제도적 틀

특정 지역을 포괄하고 지역 내 국가들을 일정 범주 안으로 결속하는 지역 기구, 조직, 다자협약 등을 아우르는 제도적 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정치, 안보, 군사적 이유로 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리고 세계 경제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로 경제적 목적의 지역 기구 및 조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은 시작이 늦었던 것에 비해 활발한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적 틀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경제통합의 과정을 가장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될

1) EU는 금융 협정 유형 중 재정 동맹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 있는데, 아세안+3 지역에서는 제도적 틀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그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 경제통합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무정부 상태의 국제 질서, 국가 이익 등과 같은 개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규범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행위자와 그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Baylis et al. 2001: 224-252). 이에 따르면 지역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국가는 실물경제 부분과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 중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아세안+3의 경제통합에 있어 제도적 틀은 국가 간 협력을 견인하여 참여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틀이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제도적 틀이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제도적 틀 내에서 지역 경제통합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지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 가설 1. 아세안+3의 경우 제도적 틀은 지역 내 경제통합을 촉진·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제도적 틀 내에서 경제통합은 실물경제 통합 이후 금융경제 통합으로 파급되는 선형적 과정이 아닌 상호 독립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가들은 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또는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 틀 안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제도적 틀은 각 지역의 경제통합이 강화되면서 함께 발전하고 있다. 아세안+3 지역에서는 제도적 틀이 경제통합을 강화·촉진시키는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 등의 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의 흐름이 실물경제에서 금융경제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형성, 1957년 관세동맹 체결 등 실물경제의 통합을 진전시킨 이후, 1979년 유럽 통화 제도 발족,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단일 통화 합의 등 금융 부문의 통합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급 효과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 등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무역 협력을 금융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는데, 이는 통합의 영향력과 위험성을 고려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있어 일정 부분 부채를 갖고 투자에 임할 경우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과 동시에 큰 손실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도적 틀 차원에서 실물 거래의 협력보다 위험 부담이 큰 금융경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이 선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유럽 등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에서는 제도적 틀이 지역 경제통합을 이루고 난 이후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3 지역에서는 제도적 틀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견인하여 참여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내 경제통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CMI의 형성 과정을 보면 아세안+3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제도적 틀이 공

고해진 이후 발생하였으며, 또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기까지 제도적 틀이 기반이 되어 통합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배경에는 상당수의 역내 국가들이 안보적으로 미국과 양자 동맹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지역 경제 공동체 설립과 참여에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세안+3 정상회담이 자리를 잡게 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3 라는 제도적 틀이 정례화되면서 CMI의 체결에 이르렀고, 이는 지역 내 국가들의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함께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도적 틀은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소속 국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며 논의를 전개할 때 제도적 틀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통합이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아세안+3 지역에서는 실물경제 통합과 금융경제 통합이 선형적인 과정으로 파급되기보다는 상호 독립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리더의 정책 결정

리더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위자로서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정책을 결정·수행하는데, 이는 지역 경제통합의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아세안+3 지역의 경우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통합을 진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 이외에도 행위자 그 자체의 변화에 따라 경제통합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즉, 통합을 추진하는 국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지역 경제통합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경제통합이라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중에서 국가 리더는 지역 경제통합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가설 2. 국가 리더는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역 경제통합의 달성은 추진 국가의 지역 내 영향력이 클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ECSC 출범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과 ECSC 초대 의장 모네의 리더십은 유럽의 지역 경제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설립의 목표는 두 차례 큰 전쟁을 겪고 난 후 유럽 내에 초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석탄과 철강 산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프랑스와 서독을 중심으로 통합 조직을 형성하고 전쟁 재발이라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안보적 관점에서는 유럽의 지역 경제통합 노력이 독일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고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경제적으로는 전후 붕괴된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고 기간산업을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유럽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었다(Lynch 1984).

하지만 위와 같이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리더들의 정치·

경제적 위험 회피의 의지 이외에도 지역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 리더들은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리더들 모두 위험 회피의 방법으로 경제통합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안에 따라 경제 협력이 유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경제통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역내 리더들의 의지 이외의 다른 요인들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 리더십(State Leadership) 문제는 지역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지역 내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공동체 내 국가들의 사안을 조정·중재할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 아세안+3 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990년 동아시아경제 협의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를 최초로 제안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개인 리더로서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강한 비전과 열망을 지니고 있었으나, 한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반대로 인해 당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Rozman 2007: 44-58). 마하티르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여 지역 경제통합을 추구하였지만, 서양과 분리된 아시아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구한 점(Beeson 2000), 지역 내에서 말레이시아는 중국·일본과 달리 국가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점을 그 실패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위 사례를 볼 때, 리더가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에는 자국의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경제통합이 이러한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며 추진할 때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결정의 행위자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경제통합이라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의 지역 내 영향력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경제통합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리더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함과 함께 얼마나 영향력 있는 리더가 지역 경제통합을 추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3) 외부적 충격

세계 경제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 메커니즘을 바꿀 만큼 큰 힘을 가진 외부적 충격은 지역 경제통합에 분명하고 뚜렷한 영향력을 가진다. 외부적 충격은 국가들의 이익 추구 경향을 자극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게 하지만, 그와 함께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경제통합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개별 국가들 및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지역 경제통합의 목적을 경제적 위험 회피로 이끄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물경제 또는 금융경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충격이 지역 내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다음의 가설을 통해 외부적 충격과 지역 경제통합의 관계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가설 3.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 국가들은 경제적 위험 회피 경향을 보이며 지역 내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충격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즉, 실물경제 부분의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 부문에서 통합이 촉진되고, 금융경제 부분의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이 촉진된다.

무역·통상 부분을 아우르는 실물경제 부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외부적 충격으로 19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꼽을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 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농산물에 관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게 되었다. 우선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관세를 높게 설정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는 기존의 보호정책에 대하여 미국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과 EC, 아시아 국가들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선진국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정태인 1994).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WTO 체제의 출범이라는 실물경제 부분의 충격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세를 가속화시켰고, 그와 함께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적 대응으로는 EAEC 설립 제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을 아우르는 EAEC를 설립함으로써 역내 무역과 투자에 있어 정책 협조를 꾀하고 나아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에 영향을 준 외부적 충격으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지역 경제통합, 그 중에서도 금융 부분의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세안+3 체제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 체제 속에서 2000년 CMI, 2009년 CMIM가 체결되어 지역 내 금융경제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물경제 부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는 그 충격으로 인해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이 추진·강화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결과 성립하게 된 WTO 체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을 가속화시킴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 남미공동시장 등과 같은 세계 무역의 블록화 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금융경제 부분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는 그 충격으로 인해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례로는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발생한 그리스 금융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각각 아시아와 유럽의 금융경제 통합이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요약하면 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조건들이 모두 작용할 때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제도적 틀만 있을 경우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거나 EAEC와 같이 설립 자체가 실패할 수 있게 되고, 리더의 정책 결정은 지역 내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을 경우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지역 경제통합이 CMI에서 CMIM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지역 경제통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가 자국의 경제적 상황이 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을 아우르는 아세안+3 지역은 여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통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북미, 남미 등지에서는 무역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유무역협정 등 실물경제 부분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진 후 금융경제 통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아세안+3 지역에서는 CMI로 대변되는 금융경제 부분의 협력은 진전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경제통합이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통합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경제통합의 발전 과정

아세안은 1967년 출범 당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안보적 목적이 강했지만, 1976년 발리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물경제 부분의 협력과 통합을 본격화하면서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회원국이었던 5개국 정상들은 최초의 경제 협력 조약인 아세안 특혜무역협정에 합의하여 지역 내 무역 활동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세안 공업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중복 투자 방지, 규모의 경제 및 분업체계를 확대하여 참여 국가들이 특정 공업제품 생산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특혜무역협정이 시행된 이후 지역 내 기업들은 약 30~50% 수준으로 관세가 내려가면 실질적인 교류 증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1981년까지 10% 인하 수준에 그쳤고, 관세 인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들은 교류 증대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Hill et al. 2010).

아세안+3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형성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AFTA는 1992년 아세안 회원국들이 싱가포르 선언을 채택하며 시작되었고, 지역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데 합의하였다. 주로 공산품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며 역내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협정이

개시된 이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차례로 합류하여,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²⁾

그러나 AFTA가 아세안+3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우선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자유무역에 대한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자유무역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협정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진 바 있다(연합뉴스 2002/01/05). 또한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AFTA만으로 경제 협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요한 2004).

최근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은 역외 국가를 상대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과의 협정은 지역 경제통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아세안의 개별 국가들과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양자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 아세안과의 협상에 발판을 마련하였다(Munakata 2006: 119-121). 그 결과 2008년 일본-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세안과 중국이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아세안-중국 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2002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인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는데, 이 협정을 통해서 아세안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세안과 중국의 산업·무역 구조가

2) 베트남은 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캄보디아는 1999년에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였다.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적인 측면도 함께 내포하게 되었다(Wong et al. 2003).

아세안과 한국은 2005년부터 아세안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06년 8월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9년에 이르러 서비스·투자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협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지역 경제통합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세안+3 지역 내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보기에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지역 경제대국으로 꼽을 수 있는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한·중·일 3개국 정상들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단을 발족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세안+3 지역의 경제 협력에서는 금융경제 분야의 통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CMI를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마하티르가 제안했던 EAEC에서 찾을 수 있는데 참여 국가들의 구성이 EAEC와 CMI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EAEC 설립 실패 이후 1997년 아세안+3 정상회의는 13개국 정상들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라는 점으로 인해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였고 EAEC를 극구 반대하던 미국의 간섭도 없었다. 이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제도적 틀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 증가세를 보인 역내 국가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Hayashi 2006: 104-106).

1998년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지역 협력의 방

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 그룹과 동아시아 스터디그룹을 조직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동아시아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스터디그룹 최종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직접 투자 등과 같은 경제 분야와 함께 안보·환경·에너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East Asia Study Group 2002).

2000년 CMI의 체결은 아세안+3라는 제도적 틀, 지역 내 주요 국가 리더의 정책 결정,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이 함께 작용하여 탄생한 지역 경제통합의 산물이다. 아세안+3 정상회담의 정례회는 아세안+3라는 지역을 규정하고 경제 협력을 구성하는 범위와 틀을 제시하였고, 각 국가 리더들의 정책 결정은 이렇게 구성된 틀을 금융경제 협력의 길로 이끄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였으며, 아시아 금융위기는 지역 내 금융경제 통합으로의 방향 제시와 더불어 통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2009년에 이르러 CMIM으로 진화하여 보다 공식적이고 효력 있는 제도적 틀로 진화하게 되었다. CMI는 금융위기 발생한 국가에게 통화 스왑을 통해 일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체계였으나, CMIM으로 발전하면서 가용 외환 금액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CMI에 참여하지 않았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도 완전한 참여 국가가 되었다. 2011년 5월 4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위기 예방 기능’을 도입하는데 합의하였고,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렇듯 CMIM이 점차 진화·발전함에 따라 ‘아시아 판 IMF’으로 골격으로 갖추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 부분에서도 역내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들 간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5월

하노이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과는 별도로 CMIM의 자체 결정으로 회원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연계 자금 비율을 2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중국의 지역 내 금융경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한국경제 2011/05/05).

<표 2> 아세안+3 경제통합 발전 과정

실물경제 부문	특징	금융경제 부문	특징
아세안 특혜무역협정	규모의 경제 및 분업체제 확립 목적. 실질적 효과 없었음.	아세안+3 정상회담	EAEC의 틀 계승. 포괄적 협력 논의. CMI의 토대 마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 효과에 대한 의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아세안-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	아세안과 각 국가 간 경제적 협력 증진 계기를 마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가용 외환 금액 및 참여국 증가. 아시아판 IMF의 윤곽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	산관학 공동연구단 발족. 아직 논의 단계임.		

지금까지 아세안+3 지역 내 경제통합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실물 경제와 금융경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물경제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점진적으로 추진·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어 실물경제의 통합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경제 부분에서는 아세안+3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제도적 틀, 김대중 등 지역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리더들, 그리고 아시아 금융 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이 작용하여 CMI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

는 단기적 협력으로 그치지 않고 CMIM으로 발전하여 위기 예방 기능, 의사 결정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된 경제 협력의 틀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제도적 틀, 리더의 정책 결정, 외부적 충격이라는 변수가 아세안+3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고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은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아세안+3 경제통합의 조건

(1) 제도적 틀

제도적 틀에 관한 가설은 ‘아세안+3의 경우 제도적 틀은 지역 내 경제통합을 촉진·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제도적 틀 내에서 경제통합은 실물경제 통합 이후 금융경제 통합으로 파급되는 선형적 과정이 아닌 상호 독립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우선 아세안+3 지역 내 어떠한 제도적 틀이 존재하였고,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여 지금의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APEC을 살펴보면 아세안+3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과 다수의 국가들을 경제적 목적으로 묶은 제도적 틀으로써 지역 내 최초의 경제적 다자주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무역 협력, 투자 증진, 에너지·관광·어업 등 분야의 정책 분석 등 지역 내 경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다루고 있는데, 역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점차 활성화 되고 참여 국가가 점차 확대될수록 회원국가 간 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점차 커지고 상호 경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록 이 기구의 비강제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으로 인해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거나 참여 국가들 간 경제적·인식

적 격차를 줄여주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분명히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에 기여한 바가 있다. 첫째,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공산권 국가들을 자유주의 경제를 논의하는 곳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중국은 자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에 접어들기 시작한 1991년에 가입하였는데, 이 시기는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실질적인 탈냉전 시대가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둘째, 참여 국가들이 자유무역 의제를 논의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APEC이라는 제도적 틀이 참여 국가들을 자유주의 무역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이다.

EAEC는 비록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아세안+3 정상회담의 전신이 된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EAEC는 그 당시 미국의 반대와 주변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도화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7년 아세안+3 정상회담에 한·중·일 정상이 초청됨으로써 사실상 아세안+3 정상회담이 EAEC를 계승하여 제도적 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Kawai 2006: 31-32).

아세안+3 정상회담은 지금의 지역 경제통합을 이끌어 낸 결정적인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아세안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비공식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일 3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처음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최초 회담에 초대받았을 때 일본은 미국의 EAEC에 대해 반대하였던 기억 때문에, 중국은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에게 공격받을 것 때문에 참석을 주저하였다(Stubbs 2002: 442-443). 하지만 1996년 방콕 ASEM 회의에서 처음으로 아세안+3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과 호주도 아시아 내 제도적 틀이 환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Stubbs 2002).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아세안+3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이끌었고, 회담에 지속됨에 따라

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일본이 1997년 IMF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은 아세안+3 지역 내에서 공식적인 제도적 틀로 자리를 잡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아세안+3 정상회담이 EAEC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작하게 된 것과 같이 CMIM이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된 경제 협력의 틀로 발전하여 AMF를 보완·발전하는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CMIM은 위기 예방 기능, 모니터링 기능 도입 등과 같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추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AMF가 추구한 형태와 유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 지역을 아우르고 지역 내 국가들을 일정한 범주 내로 결속시키는 지역 기구, 조직, 다자협약 등과 같은 제도적 틀은 아세안+3 지역 내 경제 협력과 통합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와 함께 제도적 틀은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촉진하여 특히 금융경제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경제통합을 이루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틀이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부문의 통합이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의 양자적 관계에 치우친 무역 패턴을 꼽을 수 있다. 중국 경제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무역 비중이 중국으로 다소 분산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최대 무역 시장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은 주요 수출 상품이나 산업 구조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국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 상호 간에도 수출 주력 품목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 협력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경

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번순 2004). 비록 아세안은 한·중·일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실물경제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지만, 이러한 경쟁적 산업 구조는 지역 경제통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지역 경제통합과 국내 정치와의 상관관계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비교적 산업이 발전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주력 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농수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개방화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 상품의 대량 유입을 우려하는 국내 농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지역 내 경제통합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Katada 2009). 한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발효 연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자국 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서울신문 2010/01/14).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경제통합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3 자유무역협정을 달성하고, 호주·인도·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세안+6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후, APEC 차원의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Kawai et al. 2010). 비록 지역 내 실물경제 통합이 비교적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개발은행은 이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세안+3 지역에서는 제도적 틀이 형성되면서 지역 내 금융경제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실물경제의 통합은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실물경제에서 금융경제로 파급되거나 동

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통합의 방향성을 실물 경제 또는 금융경제로 결정하는 요소인 리더의 정책 결정과 외부적 충격이라는 변수는 지역 경제통합에 어떻게 작용하여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을 진전시키게 되었는지 다음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2) 리더의 정책 결정

리더의 정책 결정에 관한 가설은 ‘국가 리더는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역 경제통합의 달성은 추진 국가의 지역 내 영향력이 클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다. 가설에 따르면 국가 리더가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할지라도 리더의 지역 내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통합을 이루기 힘들게 된다. 마하티르는 EAEC라는 경제적 공동체 설립을 통해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국가 리더십 한계, 역외 국가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후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아세안+3 정상회담이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중·일과 같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내 다자적 제도 형성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Rozman 2007).

지역 경제통합에 관한 국가의 영향력과 경제통합의 성공 가능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 일본의 AMF 설립 시도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7년 9월 AMF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였는데, IMF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아시아만의 통화기금을 설립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IMF가 담당하고 있는 외환 시장의 안정, 자금 공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한 것이다.

일본이 AMF를 추진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국 화폐인 엔화를 단계적으로 지역 내 기축통화로 자리매김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주도하여 통화기금을 구축하게 되면 이에 참여하는 주변 국가들은 엔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본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IMF 등 신자유주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일본 중심의 통화기금을 설립함으로써 그에 대항하고자 하는 일종의 서양과 분리된 아시아라는 감정에 근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AMF 설립 시도가 실패로 귀결된 주요 이유로 기존의 IMF 체제를 고수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시도가 충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AMF 제안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AMF 설립이 중국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일본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여 AMF 설립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AMF 추진 실패는 1998년 미야자와 이니셔티브라는 결과물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는 금융위기에 처한 역내 국가들에게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정책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일본은 이 조치를 통해 지역 내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지역 금융경제 통합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지역 경제통합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여 다자화 틀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였으나, 주변국들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Sohn 2008). 실물경제 부분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경

제성장이라는 목표에 집중하여 정부 주도로 외자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자유주의 무역 체제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경제 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공유하며 지역 경제통합에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경제통합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자국내 반발이 비교적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섬유 및 관련 산업들이 협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증대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미국, 인도, EU 등 역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역시 경쟁적으로 아세안 이외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및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의 경우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크게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2008년 12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바 있으나, 전통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어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역시 국내 산업기반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일본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물경제 부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일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값싼 노동력, 낮은 원

가 등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아세안은 인접한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각각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중일 간 경쟁 산업의 중복,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 등과 같은 난관이 존재하고, 아세안 국가들 간에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물경제 통합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국가의 영향력과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것을 EAEC와 AMF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경제통합은 리더들이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할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더의 인식은 경제통합의 방향성을 실물경제 또는 금융경제로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는 제도적 틀에서 제시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통합의 상호 독립적 진행’에 대한 설명으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3) 외부적 충격

외부적 충격은 지역 내 국가들이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은 아세안+3 지역이 금융경제 통합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역내 경제적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고, 느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높은 연계성을 가진 지역주의의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Pempel 2008: 164-166).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아시아 금융위기가 지역 경제통합의 근본 원인이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변수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 경제통합을 자극하는 촉매제일 뿐, 그 자체만으로 현재 아세안+3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의 ‘불일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채무는 달러로 갖고 있는데 국내에 빌려줄 때는 자국 통화로 빌려주게 되는 금융 기관에서 발생하는 통화 불일치이다. 둘째, 외채는 단기로 빌려오는 반면 국내에서 빌려줄 때는 중장기 대출을 하면서 발생하는 만기일 불일치이다(MacIntyre et al. 2008: 7). 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융경제 부분의 취약성과 함께, 외국 투기자본의 태국 바트화에 대한 공격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가 외채를 상환하기 불가능한 상황, 즉 국가 파산 상태에 이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Noble et al. 2000: 2-4). 그런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단일 국가에서 발생하고 그 친 것이 아니라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지역 내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에게도 경제적 위협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경제 위기로 인식되었다.

금융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은 IMF로부터 지원을 받아 외채를 상환하면서 IMF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금리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 적극적인 대외 개방, 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IMF의 기준에서 설정된 ‘국제화된 표준’에 근거한 것이었다(Eichengreen 2000: 182-186). 문제는 이러한 표준이 단기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로부터의 무분별한 투기 자본이 유입되어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IMF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모색하였지만,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기 외채의 압박으로 인해 IMF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이러한 IMF 체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아시아 금융위기는 IMF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아세안+3 지역을 경제적으로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CMI라는 금융경제 협력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2009년 CMIM이 구축되면서 모니터링 기능의 확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이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는 지역 내 국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은 CMIM과 같은 아세안+3 지역 내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에 시작점이 되었고, 또한 금융경제 통합이라는 방향성을 갖도록 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 충격은 국가 리더가 경제적 위협 회피라는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고 경제통합이 실물경제 혹은 금융경제로 진행될 것인지를 나누는 요인이 될 뿐, 그 자체만으로 경제통합을 이루기는 어렵다. CMI를 체결할 당시 일본에서는 이것의 궁극적 지향점이 AMF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Chey 2009: 460), 현재 발전되고 있는 CMIM이 추구하는 방향 역시 일본에서 최초 제안하였던 AMF의 모델과 점차 그 유사한 형태를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다. 만일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이 아세안+3 지역의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을 진전시킨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최초 일본에서 AMF의 설립을 제안하였을 때 주변국들은 일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MF는 미국과의 입장 충돌, 중국의 반대 등 외부적 충격 이외의 요인들로 인해 실패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적 충격을 경제통합의 유일한 변수로 고려할 경우 AMF 추진의 실패를 설명하기 힘들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정책 결정, 특히 중국의 정책 결정에서 보였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물경제 부분에서는 통합의 진전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눈에 띄는 외부적 충격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세계 무역의 신자유주의적 추세가 지속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실물경제 부문의 흐름을 지역 경제통합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CMIM은 아세안+3 지역의 금융경제 통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세안+3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비록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EAEC와 AMF라는 제도적 틀 역시 경제통합에 영향을 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요소로 국가 리더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이 지역 경제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통합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이 지역 국가들에 작용하면서 경제적 위협 회피라는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며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아세안+3 지역은 최근 10여 년 간 경제통합의 단계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 왔다. 비록 EU와 같이 경제 연합 직전의 단계에까지 이르거나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이전의 지역 내 경제 협력보다는 분명한 제도화된 틀 내에서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최근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는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거대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실물경제 부분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지속됨과 함께 지역 별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으며, WTO 체제의 성립·발전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1년에는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발표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 퇴치를 지향하면서 농업·서비스·지적 재산권 등 폭 넓은 사안을 무역 자유화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고자 하고 있다. 금융경제 부분에서는 민간 부분의 국가 간 외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 협력도 경제 블록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 블록 중 가장 진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EU는 ECSC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통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세계의 여타 지역에서는 EU를 경제통합의 모델로 삼고자 하고 있다. 그 중 아세안+3 지역은 다른 경제 블록에 비해 비교적 경제통합의 진전이 더딘 편이었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은 상당 부분 달성하게 되었다. 반면 역내 국가들 간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은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제도적 틀, 리더의 정책 결정, 외부적 충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도적 틀은 지역 내에서 EAEC의 실패를 경험한 후 아세안+3라는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는 아세안+3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제도적 틀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CMI, CMIM 등과 같은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이 지역에서는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 부분의 통합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제도적 틀 내에서 실물경제

의 통합과 금융경제의 통합이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이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으로 귀결된 데에는 리더의 정책 결정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정책 결정은 국가 리더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아세안+3 국가들의 경우 금융위기에 대비한 안전망 확보와 같은 부분에서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금융경제 부분의 경제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중·일의 결정이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세안+3 지역의 대표적인 외부적 충격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지역 내 국가들을 경제적 위험 회피라는 공통의 경제적 이익으로 결속할 수 있게 하여 금융경제 부분 통합을 진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아세안+3 지역을 금융경제 통합으로 이끈 결정적이고 유일한 요인이기보다는 지역 내 경제통합이 금융경제 측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은 각 국가 리더들이 경제적 이익에 따르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서 비롯하여,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거치면서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이 촉진되었고, 아세안+3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서 제도적 틀이 갖춰져 현재와 같은 경제통합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비록 실물경제 부분의 통합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진전되고 금융경제 부분의 통합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초기 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역내 국가들 간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세안+3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점차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경제통합, 아세안+3, 제도적 틀, 리더의 정책 결정, 외부적 충격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2010년 3월 24일 CMI 다자화 출범.” 12월 28일.
- 박변순. 2004. “동남아 경제의 발전요인과 특성.” 『동남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전략』. 서울: 오름
- 『서울신문』. 2010. “中-아세안 FTA 출발부터 ‘빠그덕.’” 1월 14일.
- 『연합뉴스』. 2002. “AFTA, 비관세 장벽으로 파행 가능성 예고.” 1월 5일.
- 이요한. 2004. “ASEAN 경제협력의 발전과정: 성과와 한계.”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전략』. 서울: 오름
- 정태인. 1994. “가트 역사에 비춰 본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격.” 『동향과 전망』 21.
- 『한국경제』. 2011. “한·중·일 ‘亞 금융패권’ 싸고 치열한 힘겨루기.” 5월 5일.
- Amyx, Jennifer. 2005. “What Motivates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oday?” *Asia Pacific Issues* 76. East-West Center.
- Balassa, Bela. 1962.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Routledge.
- Baylis, John and Steve Smith. 2001.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eson, Mark. 2000. “Mahathir and the Markets: Globalisation and the

- Pursuit of Economic Autonomy in Malaysia.” *Pacific Affairs* 73(3).
- Bloomberg Businessweek. 2010. “BOE’s King Says ‘Very Clear’ That Euro Area Needs Fiscal Union.” May 12.
- Chey, Hyoung-kyu. 2009. “The Changing Political Dynamics of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sian Survey* 49(3).
- Dieter, Heribert and Richard Higgott. 2003. “Exploring Alternative Theories of Economic Regionalism: From Trade to Finance in Asian Co-oper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3).
- East Asia Study Group. 2002.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http://www.aseansec.org/viewpdf.asp?file=/pdf/easg.pdf>.
- Eichengreen, Barry. 2000.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 the Wake of the Asian Crisis.” Gregory Noble and John Ravenhill eds.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Architecture of Global Fin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ashi, Shigeko. 2006. *Japan and East Asian Monetary Regionalism: Towards a Proactive Leadership Role?* New York: Routledge.
- Hill, Hal and Jayant Menon. 2010. “ASEAN Economic Integration: Features, Fulfillments, Failures and the Future.”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69.
- Katada, Saori. 2009. “Politics that Constrains: The Logic of Fragmented Regionalism in East Asia.” *EAI Fellows Working Paper Series* 21.
- Kawai, Masahiro. 2006.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Progress and Challenges.” Michael Plummer and Erik Jones eds.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sia*. Singapore: World Scientific.

- _____ and Ganeshan Wignaraja. 2010.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A Way toward Trade Liberalization?" *ADB Briefs* 1.
- Lee, Shin-wha and Hyun Myung Jae. 2007.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A Multilateral Security Approach." Melissa Curley and Nicholas Thomas eds. *Advancing East Asian Regionalism*. London: Routledge.
- Lynch, Frances. 1984. "Resolving the Paradox of the Monnet Pl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lanning in French Reconstruction." *The Economic History Review, New Series* 37(2).
- MacIntyre, Andrew, T. J. Pempel and John Ravenhill. 2008. "East Asia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ndrew MacIntyre, T. J. Pempel and John Ravenhill eds. *Crisis as Catalyst: Asia's Dynamic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irus, Rolf and Nataliya Rylska. 2001. *Economic Integration: Free Trade Areas vs. Customs Unions*. Western Centre for Economic Research.
- Munakata, Naoko. 2006. *Transforming East Asia: The Evoluti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Noble, Gregory and John Ravenhill. 2000.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Gregory Noble and John Ravenhill eds.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Architecture of Global Fin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mpel, T. J. 2008. "Restructuring Regional Ties." Andrew MacIntyre, T. J. Pempel and John Ravenhill eds. *Crisis as Catalyst: Asia's Dynamic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omfret, Richard. 2006. "Sequencing Regional Integration in Asia."

Michael and Erik Jones eds.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sia*. Singapore: World Scientific.

Rozman, Gilbert. 이신화 · 김동중 · 이성용 공역. 2007. 『동북아시아 지역주의』. 서울: 박영사.

Sohn, Injoo. 2008. “Learning to Co-operate: China’s Multilateral Approach to Asian Financial Co-operation.” *The China Quarterly* 194.

Stubbs, Richard. 2002. “ASEAN Plus Three: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Asian Survey* 42(3).

Wong, John. and Sarah Chan. 2003.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Shaping Future Economic Relations.” *Asian Survey* 43(3).

(2011. 08. 14. 투고; 2011. 09. 21 심사; 2011. 10. 18 게재확정)

<Abstract>

Conditions and a Process of Development for Economic Integration in ASEAN+3

KIM Junhyup
(Korea University)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why the financial cooperation is prominently advanced and the trade collaboration is stunted in the ASEAN+3 region. Three factors are presented in order to illuminate the main question: institutional frameworks, decision-making of regional leaders and external challenges.

Institutional frameworks can be including regional organizations, institutions or multilateral agreements which have primary purposes o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WTO system was built. In the ASEAN+3 region, the fact that the ASEAN+3 summit became a regularized annual meeting has consolidat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 region. Although the attempt to build the East Asia Economic Caucus was failed, that played a role in the blueprint of ASEAN+3 summit. The legacy has constantly continued as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Generally, regional leaders seek the national economic profit to take economic risk aversion. No matter how proper the intention is, it is hard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f the influence of states and

leaders is not considered. It is notable that the ASEAN+3 summit was successfully settled after China, Japan and South Korea positively participated in the meet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is a representative economic external challenge on the region. After the crisis, the regional economy was bound together into a financial cooperation, and the regional liquidity fund, named Chiang Mai Initiative, was created as a starting point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ereas financial integration developed rapidly in the ASEAN+3 region, there was no remarkable momentum to stimulate the regional trade cooperation.

Those three factors does not affect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spectively. Institutional frameworks were based on the economic integration, and decision-making of regional leaders gave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finance or trade. The external challeng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provides Asian countries with the most significant stimulation, but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challenge cannot lessen the influence of two factors in economic integration.

Keywords: Economic integration in ASEAN+3, Institutional framework, Regional leader, External challenge